

우익 동원에 맞불 놓고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촛불을 들어야 한다



김종우 기자

우익 총공세와
퇴진 운동의 과제

3면

2017년 정세 전망
트럼프 정부 등장과
경제·동아시아 상황

6, 7, 8~9면

피해 여성 보호를
강화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10면

〈더러운 집〉 논란
여성 비하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자를
풍자한 것

4면

건설노조 대의원대회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 중단을
결정하다

11면

저항의 역사를
왜곡·축소한
국정 역사교과서

5면

‘러시아 혁명 100년’
연재

기사가 웹사이트에
꾸준히 실립니다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백2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조기 대선과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과 법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퍼센트로 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 높아져 왔다. 위선적이나마 한때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최저임금의 “빠른 속도 인상”을 주장하고,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최저임금 9천 원을 약속했던 것도(이들은 단 이를 만에 공약을 거둬들였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탓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김기춘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7퍼센트대 인상 가이드라인’을 강요한 데서 볼 수 있듯, 박근혜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도 립서비스였을 뿐이고, ‘디플레 우려’를 부각해 금리를 낮추고 수출 기업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

결국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천4백70원(월 1백35만여 원)으로 고작 7.3퍼센트(4백40원) 올랐다. 전년도의 8.1퍼센트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파르게 높다’고 반발하며, 전체 협약 임금인상률이 3퍼센트대로 낮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대기업 정규직에게는 비정규직을 위해 임금을 양보하라고 압박하더니, 정규직의 낮은 임금 인상률을 근거로 밑바닥 저임금 노동자들도 압박한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조건 개선을 위해 정규직이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노동운동 일각에서도 공유하는 생각)이 완전히 비현실적임을 보여 준다.



“계란 한 판도 못 사는 용돈 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용직 전체의 임금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결코 공정한 잣대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절대적 액수 자체가 워낙 작아 대폭 올라야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2015년을 기준으로 비혼 단신 1인 가구 생계비의 80퍼센트, 2~3인 가구 생계비의 4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저임금 노동자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구매력을 감안해 각국의 실질 최저임금을 따져본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프랑스의 절반밖에 안 됐다. 최저임금이 낮다고 평가되는 미국에 견줘도 75퍼센트 수준이다. 치솟는 물가에 ‘계란 한 판도

못 사는 용돈 임금’이라는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이 충격이게도 노동자 7명 중 한 명(2백66만 3천 명)은 이런 ‘용돈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무려 13만 명이나 된다.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늘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2.5배 가까이 경증 뛰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크게 양산했다는 점에서도 저임금층 해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제시하

는 최저임금 1만 원,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등의 요구는 완전히 옳다. 정부 추천의 공익위원회가 주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최저임금 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정당하다.

정의당, 노동당, 울산의 두 무소속 의원 등 진보정당들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지지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자’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도 지난해 총선 이후 최저임금 1만 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패키지 정책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을 특별히 강조하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퍼센트 하한선’은 2012년

에 문재인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광주·제주 등 일부 지자체가 생활임금조례로 추진한 8천3백~4백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을 비롯한 주류 야당이 지난해에도 요란하게 말잔치는 했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획득하고도 개혁입법 통과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19대 국회에선 여대야소를 이유로, 20대 국회에선 최저임금위원회를 어찌할 수 없다는 핑계로 매번 요리조리 회피해 ‘최저임금을 표 연을 도구로만 보는 것이냐’는 빈축을 샀다. 주류 야당과 독립적으로 저항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지난해 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의 공식 요구로 채택되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측의 단일 요구로 제시되는 등 지지를 넓혀 왔다. 그동안 최저임금 투쟁의 동력이 취약했던 점 등 때문에 과연 현실적이나 물음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바람직하기로는 조직 노동자들이 임금 공격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하는 자기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면서 최저임금 등 비정규직의 요구를 결합시켜 함께 싸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용자들이 밥 먹듯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시키려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자체보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용자들을 강제하는 데서 노동조합의 존재, 현장의 세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전체 노동자의 20퍼센트가량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광범한 저임금층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박설

쑤얼트를 제주에 배치하려는 미국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계획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에 최신예 구축함인 쑤얼트 호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미친 개’ 국방장관 매티스의 방한 직전에 미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에 이 구축함을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미 해군제독의 이름을 딴 쑤얼트 호는 항공모함을 잡는 최신 구축함이다. 이 구축함은 상대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레일건도 발사할 수 있는, 이지스함 세 척 비용(5조 원 이상)의 소위 미래형 첨단무기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개발해 온 쑤얼트 호 세 척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그동안 공언해 왔다. 미 국방부는 쑤얼트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꿈의 전투함’ 혹은

“미국의 최첨단 미래형 전략자산”이라고 불러 왔다.

쑤얼트가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5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만든 이 구축함에는 이지스 구축함과 달리 은밀하게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레이저 탄두인 일명 레일건이 장착된다. 레일건은 최첨단 레이더 장치 덕분에 상대의 방어망조차 무력화 시킬 정도로 빠르게 탄두를 날릴 수 있어, 쑤얼트는 “항공모함 킬러”라 불린다.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도 빠른 속도로 기동이 가능하다.

미국은 첫 실전 배치 지역으로 제주 해군기지를 선택한 것이다. 제주도 와 이어도는 난사군도—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서해로 이어지는 U자 모양의 해역을 지나는 곳이다.



동아시아 군비 경쟁 가중시킬 쑤얼트 구축함.

이곳은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 부르는 제1도련선에 직결된 지역이기도 하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을 ‘호위’하는 랴오닝함 같은 중국의 해상 전투력

을 무력화하려고 미국이 오랫동안 개발해 온 ‘전략자산’을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주도 인근에서 서해를 빠져나가는 중국의 항공모함(랴오닝함)에 대한 직

접적인 공격 태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계산이다.

한마디로 한국을 대중국 전초 기지로 삼아 한국을 대중국 견제에 더 깊숙이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쑤얼트 호는 한국의 사드와 일본의 이지스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기지와 합체돼 그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한·미·일 MD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은 2월 7일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쑤얼트 배치 반대를 촉구했다. “미군 전투함의 제주 해군기지 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김여진

우익의 총공세에 맞서 모두 거리로 나서자

김문성

박근혜 일당의 가증스러운 발악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지속적 압박에 의해 청와대 실세 비서들과 장관들이 구속됐다(김기춘, 안종범, 조운선, 김종덕, 문형표).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도 구속됐다.

이들의 혐의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개인적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서로 엮여 있음도 분명해지고 있다.

재벌 총수들은 법원 등의 도움으로 구속을 면했지만, 삼성과 SK 총수의 뇌물죄를 입증할 정황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일당이 일말의 소생 가능성이라도 잡아 보려고 벌이는 최근 작태들은 너무 조잡해 기가 막힐 지경이다.

박근혜는 “거짓의 산” 운운하며 촛불 운동, 특검, 헌법재판소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태극기 집회가 촛불보다 많다며 고맙다고도 했다. 최순실은 난데없이 ‘민주 투사’ 흉내를 냈다. 그 광경을 본 청소년 노동자 말따나 “염병!”이다.

우익 지지층에 공공연히 반격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 결과 우익 지지층 결집 효과를 약간 냈다. 하지만 우익이 유포하는 각종 음모설의 진원지가 사실상 박근혜 본인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우익의 ‘가짜 뉴스’는 과거 독재정권이 벌인 정치 공작을 연상케 한다. 가령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조작’설을 온·오프라인에서 배포하고, 박근혜의 하수인들로 가득 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에 JTBC를 징계하라고 압박한다.

박근혜가 ‘애국 세력’이며, 나를 위해 나서라’ 하며 부패 범죄 수사에서 본인이 살아남는 것을 나라 구하기와 연결시키는 걸 보면, 하도 어처구니없어 우리 편이 오히려 ‘분노 피로증’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그 졸개들도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에서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부패와 권력 농단을 고영태·노승일 등이 꾸민 음모라는 식으로 몰다가 재판관들에게 편견(“증언을 잘 듣고 질문하세요”)을 듣거나 증인의 반박을 사기 일쑤다. 야비하게도 최순실과 고영태의 내연 관계까지 꼬집어 냈다. 우파 언론들은 박근혜 탄핵과 하등 관계없는 이슈를 흥미거리 소재로 삼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익 지지층이 다소 결집하는 듯하자, 우르르 탄핵 반대 집회로 몰려갔다. 그러면서 정작 박근혜가 만든 ‘새누리당’ 당명은 바꿨다. 새 당명 자유한국당을 보고, ‘박정희로 안 되니 이제 이승만이냐는 조롱이 나온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연계된 김영재의 처 박재윤은 특검에서 호흡 곤란 소동을 벌였다. 이게 안 통하자, 조사를 받기도 전에 ‘협박 수사’라며 최순실 흉내를 냈다. 지금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일당의 발광을 보면 하도 가당찮아 웃다가 호흡 곤란이 올 지경이다. “염병하네”라는 말이야말로 근래 가장 대중적 심금을 울린 단어일 만하다.



국회 탄핵 이후 선거를 의식해 우경화하는 주류 야당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 뒀선 안 된다.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다”

박근혜 일당의 총공세는 퇴진 운동 지지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우익의 반동 시도가 확연히 느껴지는 상황에서 열린 2월 4일 집회는 40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물론 국회 탄핵 전인 11~12월보다는 규모가 감소했다. 그러나 퇴진 운동이 탄핵 이전보다 훨씬 더 예리한 정치 지형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령 현재가 2월 내 탄핵이 어렵도록 일정을 잡으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신경을 쓴 것은 우파의 압력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반발이 커지자 재판부는 3월 초순 탄핵 인용이 가능한 일정을 다시 내놓았다.

지금은 우익의 동원에 맞서 총력을 쏟아 거리 동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더 많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 2~3월은 비상한 각오로 집회 규모와 기세를 늘려야 한다.

이유는 첫째, 권력층의 핵심부에 있으므로 박근혜와 그 일당은 절대 순순히 물러날 집단이 아니다. 게다가 권력 의지가 남달라 매우 교활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퇴진 운동의 성과물일 테지만, 그 결과로 대중의 변화 염원에 크게 못 미치는 친노 세력이 유력한 정권 교체 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퇴진 운동의 한계이자 약점이다. 일찍이 박근혜와 우파는 이런 점을 잘 활용해 집권했다. 지금도 이 점을 이용하려 한다.

또한 박근혜의 공공연한 저항으로 우익 지지층의 부분 회복이 있었다. 그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와 격차는 크지만) 2~3위권으로 올라섰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의 사악한 정책들을 앞장서 추진해 온 공범이다. 지금도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구도 무시한다. 이런 행보를 볼 때, 황교안이 2월 말로 예정된 특검 시한의 연장을 거부할 공산도 크다. 그것이 박근혜 구속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중심에 놓는 전략으로는 우익의 동원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퇴진 운동은 현재 압박은 물론이고 황교안과의

투쟁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배계급의 다수가 박근혜 일당을 권좌에서 제거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해도, 이들이 박근혜가 펼치던 친기업·친제국주의 정책들까지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이 박근혜의 앞잡이였던 황교안 내각의 안정을 지지하는 이유다. 그리고 세력 균형을 다시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는 것에는 지배계급 안에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박유하 무죄 등의 보수적 판결을 지지한 이유다. 경찰이 가짜 뉴스나 패러디 그림 등을 발미 삼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나서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의 뇌물죄 혐의에서 보듯이 지배계급의 핵심도 박근혜 정권과 인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따라서 박근혜 퇴진이 사악한 정책·정권의 청산으로까지 더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운동이 노동자 참여 증대로 더 심화돼야 한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려는 확산범이다.

야당들의 우클릭 경쟁 — 선거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이유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과 남경필이 보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설전중이다. 유승민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보수 후보가 단일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친박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친박”이라고 한 인물답다.

유승민은 박근혜의 압박을 받아 원내 대표에서 자진 사퇴했고,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 탈당해 출마했으며, 총선이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갑부 아버지의 지역구(경기 수원 팔달)를 물려 받아 5선을 한 ‘정치 오렌지족’ 출신 남경필이 박근혜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고 보수 단일화에 반대하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이처럼 바른정당이 박근혜 세력과 차별점을 보여 주지 못하면서 일부는 다시 구제체 쪽으로 견인됐다. 황교안의 우파 기조 유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점이 반기문 사퇴 후 황교안/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유승민·남경필/바른당보다 높아진 이유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안 그래도 중도 보수층 확보에 열을 올리던 민주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의 우클릭 경쟁을 더 자극한 것 같다. 체제 옹호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여, 부유하는 중도 보수층을 흡수해 보려는 것이다.

가령 문재인은 안보 실력자라는 명분으로 전 특전사령관 전인범을 2월 7일 영입했다. 그런데 이 자는 1980년 광주에서 발포 책임자가 전두환이 아닐 거라고 하고,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을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8일에는 그의 처인 성신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으로 구속됐다. 전인범은 이를 만에 캠프에서 철수했다.

안희정도 대연정, 사드 찬성, 노동 유연화 불가피론 등 보수적 입장을 내

놓았다. 당 안팎에서 비난도 컸지만, 안희정 지지율은 올랐다. 안희정의 지지율 상승은 문재인이나 안철수 등의 중도 보수층 구매 노력을 더 자극할 것이다. 안철수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탄핵은 찬성하지만) 현재 압박은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류 야당의 주요 후보들이 벌이는 이런 우클릭 경쟁은 공식 정치의 지형을(의제와 세력관계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진성 보수’를 내세우는 새누리당/황교안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비록 야당 지도자들은 자신이 보수층을 흡수해야 황교안/새누리당의 지지를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정치공학적으로 변명하겠지만 말이다. 그런 정권 교체가 어떤 의미일

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뒤틀림은 퇴진 운동의 진정한 잠재력을 현실화할 만만찮은 좌파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탄핵당하게 만들며 현재 우익에게 여전히 불리한 정치 지형을 만든 것은 주로 노동계급으로 구성된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행동이었다. 이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 대중에게는 더 많은 변화를 쟁취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 결과를 중심에 두지 말고 대중 투쟁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거리와 일터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계속되는 <더러운 잠> 논란

패러디이고, 그 맥락을 봐야 한다

이현주

<더러운 잠>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평범한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눈곱만큼도 관심 없던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이 여성 해방의 전사라도 된 양 표 의원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었다.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민주당은 표창원 의원을 징계했다.

<더러운 잠> 논란은 박근혜와 우파 세력이 반격을 개시하는 맥락 속에서 불거졌다. <노동자 연대> 신문 195-1호는 박근혜와 우파 세력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말의 탄핵 기각 가능성을 붙잡으려 함과 동시에, 탄핵되더라도 특검과 현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 않고 정치적으로 불복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장차 우파의 재기를 위한 발판을 놓으려 [한다.]”(다시 거리로 - 박근혜 · 황교안 둘 다 몰려나라)

그래서 박근혜는 현재 대리인단 사퇴설을 흘리며 탄핵 지연 작전을 펴왔고, 언론과 검찰을 내놓고 비난하며 모든 사태를 정치적 음모로 몰아왔다. “죽을 죄를 지었다”던 최순실도 태도를 180도 바꿔 특검을 공개 비난했다. 법원이 이재용과 전 이대 총장 최경희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표창원 의원에 대한 공격은 이런 우파적 반격의 연장선 상에 있었다. 박근혜 세력이 애초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닌 표 의원과 문재인을 우선 겨누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목적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박근혜 일당의 제거를 원하지만 체제 안정과 세력균형의 회복을 원하는 지배자들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조중동 같은 우파 언론들이 그들을 대변하면서 앞장섰다. 특히, 퇴진 운동 내부를 이간질한 것이다.

이처럼 <더러운 잠> 논란이 박근혜 세력의 의도된 정치적 공격이었음에도, 민주당은 결국 표 의원에 대한 징계(당직 정치 6개월)를 결정했다.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를수록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 문재인은 표 의원을 향



<더러운 잠>(위), 그 원작들인 마네의 <올랭피아>(아래 왼쪽)와 지오르지오네의 <잠자는 비너스>(아래 오른쪽).

해 “품격과 절제”를 운운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표창원 네 마누라도 벗겨 주마” 하며 극성을 파온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에게나 쏘아 줘야 할 말이 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반격을 노리는 박근혜 세력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응해 오히려 우파의 기를 살려 준 것이다. 이로써 표 의원 공격은, 박근혜 세력이 꺼내든 여러 반격 카드 중 거의 유일한 게 성공한 카드가 된 듯하다.

<더러운 잠>이 여성차별적인가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운운하며 ‘세월호 7시간’을 은폐하려 해 왔다. 그러더니 이번에도 박근혜가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을 앞세웠다.

그런데 여성 운동과 좌파 진영 내에도,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이런 행태가 위선적이라고 여기면서도, <더러운 잠> 자체는 여성 비하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박근혜를 나체로 묘사한 것이 “성적 대상화”일 뿐 아니라, “여성(성)”을 부각함으로써 여성 전체를 비하했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을 눈요깃거리로 만드는 성적 대상화가 사회에 만연한 게 사실이다. 그리고 부패한 권력자의 문제를 ‘여성’의 약점으로 돌리는 오해나 고통이 운동 안에서도 가끔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현상에 정당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가 이 그림도 이런 잘못된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더러운 잠>은 “미술 교과서에도 나오는” 마네의 <올랭피아>

(1863)와 지오르지오네의 <잠자는 비너스>(1502)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얼굴을 넣어 패러디한 것이다. 시종 드는 최순실의 모습은 <올랭피아>에서, 자고 있는 박근혜의 모습은 <잠자는 비너스>에서 따 왔다.

그리고 맥락을 봐야 한다. 권력자를 조롱하는 것인가, 평범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한다. 물론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아 작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더러운 잠>은 메시지가 매우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표현돼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크지 않다. 그 그림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그에 대한 항의라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술인 블랙리스트 정책에

대한 항의 성격도 있다. 그러므로 그림이 세상에 나오게 된 맥락을 간과한 채 해석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다.

나체화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림을 낳은 정치·사회적 맥락, 나체 그림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그러면, <더러운 잠>은 여성으로서의 박근혜가 아니라 세월호 구조에 무관심했던 ‘권력자로서의 박근혜’를 유명 그림에 빗댄 패러디일 뿐이다.(여기서 예술적 성취도는 쟁점이 아니다.). 또한 여러 장치들을 통해, 최순실과의 관계, 독재 정권의 그늘,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정부 전체를 풍자하고자 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림을 그린 이구영 작가도 “이 그림의 핵심은 금기에 대한 도전이며 권력자들의 추한 ‘민낯’을 드러낸다는 ‘누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2월 10일 이구영 작가는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한 항의 표시이기도 하다”며 박근혜를 검은색으로 표현한 <더러운 잠 2탄> 그림을 발표했다.)

민족미술인협회도 이 그림이 “세월호 7시간” 참사 당일, 구조를 못한 통수권자로서의 무능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앓은 자세로 관객을 포령이 응시하고 있는 <올랭피아>의 여성이 아니라 비너스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수동적 여성의 모습을 재현”해 차별적이라는 주장도 뜬금없다. 세월호 침몰 시간에 알고도 사생활이나 즐기고 있던 박근혜를 비유적으로 풍자하고자 했던 것인데, 박근혜를 ‘능동적 행위자’로 그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결국 이 다양한 맥락이 제거된 채, 모욕당한 ‘여성’ 박근혜와 ‘여성’을 모욕한 ‘남성’ 작가·‘남성’ 의원만이 부각되는 것은, 맥락 없이 모든 것에 ‘젠더 프레임’부터 적용하는 여성 운동 일각의 환원론을 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모든 것을 ‘젠더 프레임’으로 보면 앞길에도 이번처럼 가장 여성차별적인 우파에 속아 넘어가는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그림과 표 의원이 아니라 위선적이기 짝이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이다.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여성해방 하루학교



일시 3월 5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50분

장소 서울 중부여성발전센터 2층 강당
(지하철 5호선 마포역 1번 출구에서 250m)

주최 노동자연대

참가비 15,000원

(대학생 할인가 10,000원 / 청소년 할인가 7,000원)

문의 02-2271-2395 / 010-4909-2026 (문자 가능)
mail@workerssolidarity.org
www.workerssolidarity.org

오전 10:00 ~ 11:30

러시아 혁명 100년

러시아 혁명과 여성해방

연사: 정진희 '노동자연대' 활동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역은이

오전 11:50 ~ 오후 1:20

오늘날 여성 차별의 현실과 쟁점

연사: 이현주 '노동자 연대' 기자

오후 2:30 ~ 4:00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

연사: 정진희 '노동자연대' 활동가,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오후 4:20 ~ 5:50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해방

연사: 최미진 '노동자연대' 활동가,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제국주의를 변호하고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왜곡·축소하다

김동철

1월 31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하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참여형 교과서 개발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최종본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하 검토본)과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사실 오류가 수도룩한데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핵심 주장인 ‘대한민국 수립’, ‘박정희 미화’ 등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검토본 비판은 ‘국정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노동자 연대> 189호를 보시오.)

최종본과 함께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자들과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인사들이 핵심을 차지했다.

그중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기동은 제주 4·3항쟁을 ‘공산폭도’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문제를 일으켰던 인사다. 동북아재단 이사장 김호섭은 뉴라이트의 선봉대 격인 한국현대사학회 이사였고 교과사 교과서 옹호에 앞장섰던 자다. 교과서분석연구회 대표 김동순은 기존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결국 최종본은 ‘뉴라이트가 집필하고 뉴라이트가 심의한’ 역사교과서라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제국주의 옹호

교육부는 검토본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반영해 최종본을 만들었다고 강변한다. ‘제주 4·3사건’ 서술의 경우 상당한 수정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본도 제주 4·3항쟁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이 저지른 학살과 만행을 제대로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제주 4·3항쟁을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로 축소·왜곡한다.

그러나 제주 4·3항쟁은 해방 후 한반도 남쪽에 광범하게 존재했던 진정한 해방과 독립에 대한 대중적 염원의



지배자들의 ‘역사 전쟁’은 현재의 계급 전쟁을 위한 포석.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4·3항쟁 1년여 전에 제주도에서는 미군정에 대한 광범한 분노에서 비롯한 노동자 파업이 있었다. 이 파업에는 제주 군정청 한국인 관리 60~75퍼센트와 1백56개 기관·단체가 참가했다. 금융·교통·제조업·교육·식량배급 등이 마비됐다. 미군 방첩대(CIC)는 ‘제주도의 총파업이 남반 전역의 파업으로 변질 가능성이 있는 시급적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강경 진압을 주문했다.

1947년 4월 미군정은 ‘극우주의자’ 유해진을 제주도지사로 임명했다. 미군정의 후원 아래 유해진은 우익 단체인 서북청년단을 동원해 ‘광범한 테러 행위’를 벌였다.

이런 탄압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4·3항쟁의 배경이었다. 항쟁은 혹독한 탄압으로 고립돼 분쇄당했다. 공식

적으로 3만 명가량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제주도지사는 미국 정보기관에 6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제주도민 대여섯 명 중 한 명 끌로 죽었고 절반 이상의 마을이 파괴됐다.

해방 후 일어난 공장 자주관리 운동,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을 진압하며 대소 ‘반공 전초기지’를 세우고자 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가 제주도의 비극을 가져왔다.

제국주의가 일으킨 문제는 단지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제주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문제가 그렇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렇다. 최종본은 ‘위안부’ 문제를 단지 과거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축소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동북아 지역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 돈

몇 푼으로 ‘위안부’ 문제를 덮어 버리려는 의도로 추진된 것을 보더라도 ‘위안부’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종본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라 할 만하다.

반(反) 노동자적 관점

최종본의 ‘박정희 찬양’도 여전하다. 최종본은 새마을운동이 ‘관 주도’로 진행돼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첨가했을 뿐, 여전히 새마을운동을 이 나라(특히 농촌)를 ‘잘살게 만든 개혁운동’으로 추켜세운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급속한 자본 축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농촌의 불만을 억눌러 도시의 반정부 분위기가 농촌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농촌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근면, 자조, 협동’ 등 노동력 동원을 강조하는 구호가 강조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농민 쥐어짜기는 도시에 의한 농업 지배라는 자본주의적 발전 논리에 따른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도시의 계급들이 단순히 똑같이 득을 본 것은 아니었다. 농촌의 새마을운동은 도시의 ‘공장새마을운동’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내핍을 강요했다.

이런 억압과 통제가 노동자들의 저항을 막을 수는 없었다.

1970년대 끈질기게 벌어진 노동자들의 투쟁은 1979~80년에 경제·정치 위기를 배경으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1979년 부마항쟁 직후 경기도 지역의 공장들 70퍼센트에서 파업이 벌어졌다. 1980년 봄 4개월 동안에만 그 전년도 내내 벌어진 파업보다 8배 많은 파업이 벌어졌다.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는 노동자 운동을 제압하고 다시 착취와 억압의 박정희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 전두환과 신군부였다. ‘박정희의 정치적 아들’이라 할 만한 전두환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억눌러 위기에 빠진 남한 자본주의를 지켜 내고자 했다. 이것을 막아선 선두에 광주 민중이 있었다.

따라서 최종본이 5·18 광주 민중항쟁에 대해 전대대생의 시위를 과잉 진압하면서 벌어진 일쫓으로 묘사하고 도청에서의 유혈 진압도 협상 실패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 듯 설명하는 것은 완전한 왜곡이다.

극심한 폭압에도 전두환은 노동계급의 저항을 잠시만 막을 수 있었을 뿐이다. 광주 민중항쟁 진압 후 잠시 가라앉았지만 노동계급은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현재 한국 지배자들은 전두환이 정권 초에 맞서야 했던 노동계급과는 질적으로 달라진 상대와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정책 폐기하라

교육부는 2018년에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되 올해는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청을 제재하겠다고 협박하고 연구학교 신청 기간을 늘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없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여전히 강력하고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우파들은 연구학교를 반대하는 교육감과 전교조가 학교의 ‘선택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들의 눈에는 거의 0퍼센트의 채택률로 사장된 교과사 교과서의 악몽이 아른거릴 것이다.

대표적인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운동 단체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

트위크(이하 저지넷)는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한편, 국회 교문위를 통과한 ‘국정교과서금지법’을 조속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퇴진 운동의 힘

‘국정교과서금지법’은 시급히 통과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찬성하는 바른정당 권성동이고 소위원장이 박근혜 탄핵 반대 선봉에 있는 새누리당 김진태인 것을 감안하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기회주의적 행보를 예상일로 하는 민주당이 범여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권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지도 의심스럽다.

사실 교육부가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시행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거

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힘 때문이었다. 대중 운동의 힘이 고집불통으로 보이던 교육부에 강한 타격을 가했다.

교육부가 그토록 옳다고 우기던 ‘대한민국 수립’ 주장에서 후퇴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인정한다고 해서 우파들에게서도 욕을 먹는다. 지배자들의 공통 의지가 반영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양보할 수 없지만 대중 운동의 압력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의 처지가 반영된 것이다.

얼마 전 저지넷 한상권 상임대표는 “국정 교과서가 무너지려면 황교안 체제도 같이 무너져야 한다”고 옳게 지적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수장인 황교안과 그가 추진하는 적폐들을 끝장낼 수 있는 힘은 박근혜를 궁지에 몰아넣은 대중 운동에 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파업한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융·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학교 | ☐ 기타)

☞텍스트 확대전환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세계의 지배자들

대규모 트럼프 반대 운동은 좌파가 성장할 잠재력도 안고 있다

김종환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은 체제의 위기가 극심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생긴 일이다. 이 일은 노동자와 한층 더 차별에 시달릴 여성과 유색인, 이주민뿐 아니라 세계 지배계급에게도 무척이나 난감한 상황이다.

지배자들이 곤란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로 유지한 세계 전략, 곧 자유시장 자본주의 세계 질서를 트럼프가 흔들려 하기 때문이다. 이 전략에 대해 트럼프는 적어도 1980년대부터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발전시켜 왔다(찰리 레더먼, 브랜던 심즈).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지시한 것은 기존 전략을 보호 무역주의로 대체하겠다는 그의 말이 단지 허풍이아님을 보여 준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나 멕시코뿐 아니라 독일 같은 미국의 주요 동맹들에게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월 말 신임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인 피터 나바로는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의 배후에 독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독일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들을 계속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바로는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하청공장(특히 중국과 멕시코)과의 연계를 통해 구축해 놓은 국제적 생산



트럼프 반대 시위의 규모와 활력은 미국 노동계급에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을 고무했다.

라인을 해체하려고도 한다. 그는 최근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는 조립 공장만 둔 채 주되게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면서 ‘미국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 경제의 장기적 이익을 해칠 뿐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리려면 그런 부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개인의 스타일도 지배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예컨대, 오바마도 이민자 수백만 명을 강제추방했지만, 트럼프는 더 나아가 지독한 인종적 편견을 강하게 드러내며 자신의 권한 바깥의 일들까지 행정명령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런 점들 때문에 세계 지배자들은 트럼프를 가까이해야 할지, 거리를 두어야 할지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는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과시하려고 1월 말 맨 먼저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했다. 그리고 그에게 국민 방문을 제안해 성사시켰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트럼프가 중동 7개국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는 인종차별적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이것을 옹호하지도 비판하지도 못하는

트럼프 반대 운동과 그 잠재력

트럼프에 맞서는 운동이 크게 분출했다. 이 운동은 2000년대 초 반전 운동 이후 최대의 잠재력을 보여 줬다.

트럼프 취임 다음 날 워싱턴DC에서 벌어진 시위의 참가자들은 대체로 진보파로 분류될 사람들, 샌더스 지지자들, 또는 정치에 처음 관심 갖게 된 사람들이다.

조직노동자들도 여러 곳에서 트럼프에 항의하는 행동에 함께 했다. 고무적이게도, ‘점거하라’ 운동이 강력했던 오슬랜드에서는 항만 노동자들이 트럼프에 항의하는 뜻으로 그의 취임식 날 부두를 마비시키기도 했다.

운동의 참가자들은 11월 대선 결과를 보고 우울했지만, 대규모 반트럼프 운동에 참가하면서 트럼프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무됐다. 법원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도 트럼프에 반대하는 투쟁을 건설하려 한다. 그러는 가운데 운동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두고(예컨대, 민주당에 대한 태도 문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체성 정치를 뛰어넘어 단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광범하다.

이런 자발성이 기존 좌파 활동가들의 축적된 경험, 적절한 정치와 결합된다면 운동 자체의 성장과 함께 좌파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

세계적 정치 양극화 속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정당들(미국 민주당이나 영국 노동당 우파 등 중도계 정당들)도 트럼프와 우파에 맞서는 수단으로 이런 시위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이 시위 조직에 참여했다. 영국에서는 노동당 우파와 연계된 온건한 NGO들이 운동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급진좌파를 밀어내려 하고 있다.



사진 출처: Lone Shaal(블리커)

3월 18일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은 트럼프 반대 운동이 낳은 흐름을 이어가려고 3월 18일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을 건설하고 있다.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한,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의 지배자들도 다를 바 없다. 지난 3일 남유럽 몰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독일 총리 메르켈 등은 트럼프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도 난민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몰타 선언’을 발표했다. 메르켈 등에게도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 것이다.

인종차별 반대는 갈수록 조직화하는 극우·파시즘 세력을 견제하는 데 중요하다. 이 자들은 경제 위기와 유럽연합에 대한 노동자들과 서민층의 불만을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공격으로 돌리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다.

프랑스의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의 총재 마린 르펜은 트럼프 취임에 맞춰 유럽 극우 정당들을 모아 ‘반(反)정상 회담’을 개최했다. 거기에 ‘독일을 위한 대안’(AfD), 네덜란드 자유당, 이

탈리아 북부동맹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정당들이 모두 파시스트 정당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파시스트 세력들이 만만찮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인종차별 반대 운동도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찰의 흑인 살해에 항의하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알리고 급진화를 촉진하는 구실을 해왔다. 캐나다에서도 최근 퀘벡 이슬람 사원을 겨냥한 우익 총기 난사에 항의하고 무슬림에게 연대하는 집회가 여러 지역에서 터져 나왔다.

난민 위기가 심각한 유럽에서도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정부 정책에 맞서 난민 자녀들의 학교 입학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거기에 사회주의노동자당(SEK)과 교사노조뿐만 아니라 공산당(KKE)과 시리자 지지자들도 함께했다. 이는 그리스 좌파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단결이었다. 이런 단결 덕분에, 난민들이 교육을 약속시킨다고 주장하는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이 벌인 맞불 집회를 압도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도하는 공동전선 ‘인종차별에 맞서자’(Stand Up to Racism)가 난민과 이주민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향후 브렉시트 협상에서 3백만 명에 달하는 영국 내 EU 시민권

자들(특히 동유럽 출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운동은 또한 노동당의 좌파적 지도자 제러미 코빈이 이주민 문제에서 원칙을 지키고 후퇴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우익 대중주의 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에 맞서기 위한 연합체로 ‘인종차별에 맞서자’(Aufstehen gegen Rassismus)가 결성돼 활동 중이고, 앞서 언급한 르펜 주최의 ‘반정상 회담’이 1월에 열렸을 때 그 앞에서 반파시스트 운동 지지자 5천 명이 시위를 벌였다. 또한 AfD와 트럼프의 등장에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맞서길 기대하며 급진좌파 정당 좌파당(디링케)에 입당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건설하려고 수년 전부터 사회주의자들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 즈음에 국제 공동 행동을 건설해 왔다.

지난해에도 한국을 비롯해 20개에 달하는 나라에서 수많은 항의 집회가 같은 날 벌어졌다. (관련 기사: ‘13·19 인종차별 반대 국제 행동’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올해에도 그리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캐나다, 아일랜드 등지에서 같은 행동이 조직될 예정이다.



강동훈

2008~09년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려고 보호 무역 정책을 강화해 왔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상품들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국가도 늘어나면서 무역 갈등도 늘어 왔다. 또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에 좀 더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추진됐다. 예컨대, 일본의 ‘아베노믹스’ 같은 고환율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트럼프 집권으로 전 세계에서 더 격화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TPP 철회를 선언했고, NAFTA도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기간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퍼센트 관세를 매기고 멕시코 제품에도 35퍼센트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취임을 앞두고는 주요 자동차 기업들을 죄다 압박했다. 특히,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 압박했다.

1월 31일 대미 무역수지 흑자 1~3위인 중국·일본·독일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통화 전쟁’을 선포했다. 3개국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그랬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들은 특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압박해야만 중국의 군사력 강화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이렇게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는 데다, 3월부터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고, 올해 유럽 선거에서도 EU를 반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우익 또는 극우 정당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요인들도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는 압력을 높일 것이다.

트럼프는 보호무역 정책 강화뿐 아니라 감세나 인프라 투자로 미국 경제성장률을 4퍼센트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세일 석유 등 에너지 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놔다. 또,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군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이런 정책들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감세와 군비 지출 확대 등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늘릴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면서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국제 발행이 늘어나고, 그러면 미국 국제 가격이 하락(시중 금리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달러 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이다.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미국의 중앙은행)가 금리 인상 계획을 밝힌 것도 달러 강세를 이끈 요인이다.

이 때문에 신흥국들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가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멕시코의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올해 1월 멕시코 석유 가격이 20퍼센트 올라 격렬한 시위도 벌어졌다. 신흥국들의 환율이 치솟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책은 워낙 모순이 많고 구체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정책이 어느 정도 실제로 추진될지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주류 언론들에서도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다.(‘불확실성의 시대’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1977년 저작의 제목이자 그해 그가 한 티브이 교양 프로그램 제목이다.)

특히,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지배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에 지은 공장이 많기 때문에, 멕시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지배자들 사이에 갈등을 부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채 위기와 위안화 가치 하락

트럼프 집권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신흥국들뿐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조차 가치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조만간 달러당 7위안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인 2015년에도 위안화 환율이 급등한 적이 있다. 그때도 중국에서 대규모로 자금이 빠져 나가면서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막으려고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사용했다. 하지만 결국 급격하게 환율을 올려야만 했다. 그래서 2014년에 4조 달러까지 올라갔던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최근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의 위안화 가치 하락은 단지 트럼프의 집권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특히 중국의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GDP 대비 중국의 기업 부채는 2000년과 견졌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부채를 대거 늘리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자금이 빠져 나가고 중국의 환율이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위안화 환율 상승을 완전히 막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되도록 천천히 위안화 환율을 올리는 데 있는 것 같다. 위안화 환율 상승은 중국산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려 수출 중심인 중국 기업들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인플레이

션을 높일 위험이 있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의 막대한 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달러 빚이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 기업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위안화로는 더 많은 수익을 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런 모순된 문제들을 조절하려고 환율을 최대한 천천히 올리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7년에도 중국 정부가 과연 위안화 가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중 간에 무역 갈등이 커지면 중국 정부도 자금 이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중국의 부채 문제는 전 세계를 강타하는 커다란 뇌관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의 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한국 경제도 불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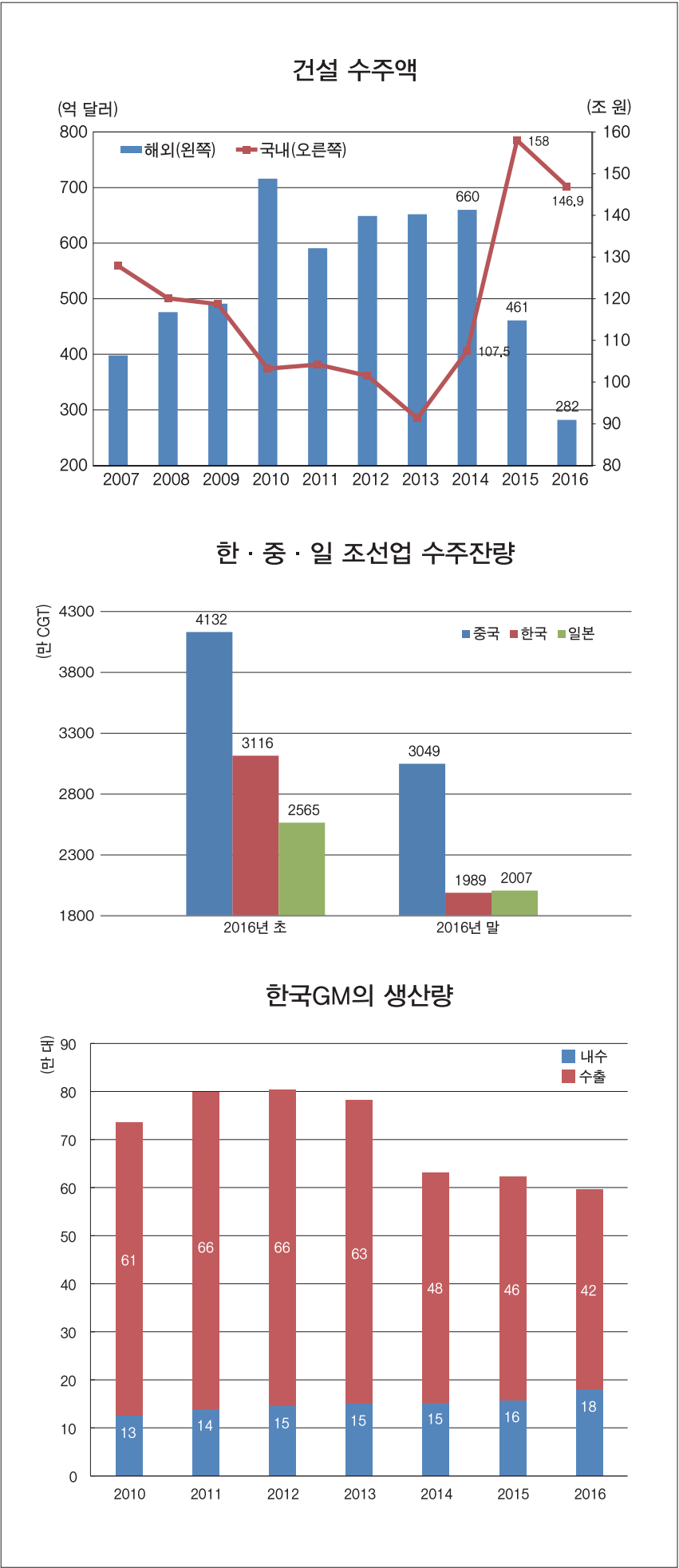
한국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데 2015, 2016년 수출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거의 60년 만에 처음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에도 한국 수출 전망은 밝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국 경제 성장을 지탱해 왔던 건설업도 꺾이기 시작했다. 2016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6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중 절반인 1.3퍼센트가 건설업 덕분이었다. 그런데 건설업의 해외 수주는 2015~16년 크게 감소했다. 2015~16년 한국의 주요 건설회사들은 해외 수주에서 까먹은 걸 국내 수주로 만회해 버티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7년에는 건설 경기도 더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가계 부채가 1천3백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국내 주택 시장을 더 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외 건설 수주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다.

결국 2015~16년 수주한 국내 건설 물량이 남아 있어서 건설업의 일감이 급감하지는 않겠지만, 건설 기업들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 회사들은 임금과 노동 조건 등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공산이 크다.

요즘은 한국의 대표적 취약 산업인 조선업에서도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수주가 급감하면서 한국의 수주잔량은 일본보다도 적어졌다. 한국 조선업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수주잔량도 급감해 남은 물량이 1년치를 조금 넘는 상황이다. 조선업 특성상 2년치 물량이 확보돼야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해 하반기까지 수주가 충분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구조조정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으로 해운 물동량이 정체하고 이에 따라 해운업 협회가 좋지 않아



선박 수요가 높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지난해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30만 대 정도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가 미국 내에 자동차 공장을 지으라는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 게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한국 GM이나 르노삼성에게는 더 큰 압박이 될 것이다. 한국GM은 지난해 60여만 대를 생산해 40만 대 정도를 수출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미국 수출 물량이다. 르노삼성도 지난해 국내에서 24만 대를 생산했는데 그중 17만 대가 미국 수출이었다. 국내 자동차 생산 물량이 감소하면서 공장 폐쇄와 해고, 임금 삭

감 같은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제품의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나 트럼프의 정책들 등등 때문에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올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노동자들을 상대로 임금 동결·삭감, 해고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사회적 대화협’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일관되게 방어하며 노동자 투쟁을 북돋는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

2017년 정세 2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미국 우선(America first)' 노선을 미국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했다. 이 연설로 그는 '미국 우선' 노선이 단지 선거용이 아님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트럼프는 오늘날 미국이 겪는 어려움은 모두 미국이 세계의 '짐'을 전부 짊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프라가 엉망이 되는 와중에 해외에 수조 달러를 써 왔다. 우리 나라의 부·힘·자신감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줬다." 사실상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 탓이라는 연설이었다.

이는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노선과 다소 결이 다른 것이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세계 질서를 관장하는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공언해 왔다. 그 질서를 책임지는 구체적 방식이 일방주의라는 맨주먹이든, 다자주의라는 비단 장갑을 낀 주먹이든 행정부마다 달랐을지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은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까?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유시장 자본주의 국제 질서가 미국 자본의 이윤 획득과 미국 국가의 패권에 유리하다고 믿었다. 미국은 항상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선진 자본주의 세계 전체를 관리하고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자국이 주도하는 질서 안으로 규합하는 것은 미국 지배자들에게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이 일에는 언제나 부담이 따랐다. 예컨대 냉전 초기 미국은 소련에 맞서 서유럽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려고 마셜 플랜, 나토(NATO) 창설, 미군 기지 건설 등 엄청난 물자를 유럽에 투여해야 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장기 호황 속에 미국이 압도적 경제력을 갖춘 상황에서 이는 감수할 만한 비용이었다.

때로 미국이 다른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할 때도 있었다(물론 미국 자본의 이익이 언제나 최우선이었다). 이를 위해 유엔·세계은행·WTO·IMF 등 자본주의 국제 기구들을 유지하며 주요 국가들의 갈등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 경제의 상대적 지위가 그때에 비해 하락하면서 미국과 다른 주요 경제들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 주요 지역들에서 제기되는 도전들에 대응하는 것은 갈수록 버거운 일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국의 패권적 지위



사진 출처: Getty Images

를 포기할 순 없다. 결국 미국 지배자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게다가 세계경제 위기로 미국이 세계 질서를 관장해 얻는 이익은 더 불확실해졌다.

미국 지배자들 중에 누구도 이 딜레마의 해법을 딱 부러지게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등장했다. 트럼프는 '이제 미국이 세계 질서 관장에 따른 부담을 혼자서 짊어질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나토, 유럽연합 등 지금까지 미국 패권 유지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기구들을 흔들고 있다.

물론 트럼프의 등장이 세계 질서의 질적 변화를 보여 준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직 선부르다. 미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대한 미국의 우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전임 정부들보다 더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이 신자유주의와 결별하고 보호무역주의로 단숨에 회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행보는 국제 정세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날을 것이다. '위기는 네 탓이다'라는 트럼프의 공격은 국가 간 갈등을 부추길 요인이다. 중국과 '무역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일본·독일 등 미국에 큰 무역 적자를 안겨 주는 서방 선진국들에게도 환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커질 것이다. 많은 지배자들이 트럼프가 70년 동안 미국 패권의 근간이 돼 온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를 흔드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내각 안에서도 주요 대외정책을 놓고 견해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외정책 상의 이견 때문에 미국 지배자들 내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트럼프의 등장은 지배자들이 장기화된 경제 위기의 해결책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안'도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세계경제를 더한층 불안정에 빠뜨릴 수 있다. 이 또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다.



사진 출처: 미 해군

미국과 일본이 공동 연구해 최근 요격 시험에 성공한 SM-3 블록2A 미사일 미국이 한국에 판매하려는 MD 무기의 하나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악화한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을 악화시킬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보면,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 레кс 틸러슨,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 피터 나바로 등 모두 중국의 부상에서 미국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새 백악관 보좌진에는 '중국과 이슬람 때문에 서방의 유대교와 기독교가 후퇴하고 있다'고 떠드는 스티브 배넌(백악관 수석 전략가) 같은 작자도 있다.

물론 이미 미국 지배자들 사이에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 패권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초당적 합의가 있다. 즉, 미국 지배자의 다수는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는 것을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긴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는 일련의 동아시아 정책

들을 추진했고(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이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불안정이 증대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은 분명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정책과 연속선 상에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와 차이도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 노선을 내걸며 오바마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악화시킬 다자 무역협정에서 미국이 발을 빼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TPP는 오바마가 아시아·태평양에서 동맹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추진한 일이었고, 미국의 탈퇴는 TPP 협상에 참여해 온 일본·호주 등 동맹국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조치다. 트럼프는 TPP 대신에 미국에 유리한 양자 무역협정을 선호하고(한국의 경우에는 한미FTA 재협상), 일본·한

국 등이 환율, 시장 개방 등에서 양보하기를 바란다. 또,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는 '안보 분담' 요구와 맞물려, 역내 미국 동맹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점들도 역내 질서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에는 오바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측면도 있다.

첫째, 트럼프 정부는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2008년 경제 위기로 미국은 한동안 군비 지출을 줄여야 하는 처지였으나, 최근 들어 오바마 정부는 군비 지출을 늘리는 추세로 돌아섰다. 트럼프는 이 추세를 더한층 강화할 참이다.

대선 기간에 트럼프는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2015년 11월에 출간된 그의 저서 《불구가 된 미국》을 보면, "군사력을 키우



사드 배치 등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협력하는 것은 국내에서 커다란 불만을 자아낼 수 있다.

는 것은 민간에 자금을 투입해 수많은 사람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군비 증강의 경기부양 효과(군사적 케인스주의)까지 언급하는 구절이 있다.

취임식 직후 백악관 웹사이트에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주요 국정수행 과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 1980년대 레이건의 모토였던 “힘을 통한 평화”가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1991년 5백 척이었던 해군 함정이 2016년 2백75척으로 줄어들었다. 우리의 공군력 역시 1991년에 비해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 이 같은 경향을 되돌리는 데 주력할 것이다.”

트럼프는 1월 27일 국방부에 핵전력과 미사일방어(MD) 강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예산 삭감 노력을 중지하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향의 새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려는 것이다.

군비 증강이 노리는 대상 중에는 예상대로 중국이 있다. 피터 나바로는 지난해 11월 트럼프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설명하는 글에서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해군력을 중심으로 군비를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트럼프의 대만 접근은 트럼프 하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보여 주는 신호탄이었다. 당선 후 트럼프가 대만 총통 차이잉원과 통화를 하자, 일각에서는 이것을 트럼프의 독불장군식 스타일이 낳은 실수로 여겼다. 그러나 차이잉원과 사들과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대만 정책의 일환이었음이 나중에 드러났다.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트럼프는 중국과의 협상이 안 되면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재고하겠다고 공언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지배자들이 군

사 행동을 불사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핵심 이익’의 하나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 직후 한동안 대만해협과 그 주변에서 긴장이 높아졌다. (최근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문제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섰다.)

셋째, 남중국해 문제가 있다. 국무장관 틸러슨은 인준 청문회에서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를 중국이 좌우하는 것은 “세계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는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중단하라는 것과 중국의 [인공] 섬 접근은 불허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당장 중국과 전쟁을 불사할 것 같지는 않지만, 남중국해를 계속 미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진행해 온 ‘항행의 자유’ 작전이 중국의 해양 확장을 저지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보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중국을 향한 칼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자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을 중국에 전가하고자 한다. 미국 경제의 문제 해결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우위를 확인하는 것을 더 노골적으로 결합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경쟁이 지정학적 경쟁과 교차하는 양상이 전보다 더 발전할 듯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실제로 불거진다면, 지정학적 갈등과 맞물려 동아시아에서 불안정이 증대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은 트럼프의 대만 접근 이후 항공모함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미국에 협조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반응도 점차 날카로워지고 있다.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그 한 사례다. 중국도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차기 한국 정부에 내밀 청구서들

한때 국내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한반도에 이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당선 후 그의 행보는 그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트럼프 정부도 ‘북한 위협론’을 대중국 견제의 고리로 삼으려 한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시사하자,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중국 비난으로 연결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일방적인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빼간다. 그런데도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돕지 않는다. 팔자 좋구만!”

트럼프 정부도 ‘북한 위협론’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자국의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고, 일본과 한국 등 동맹을 규합하고 강화할 것이다. 이미 주요 국정수행 과제에 이렇게 적시해 놨다. “우리는 이란이나 북한 등의 공격에서 미국을 방어하는 최신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 점은 2월 2일 한국을 방문한 매티스가 확인해 줬다(CNN 보도).

틸러슨은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북 압박에서] 과거에 했던 것을 넘어서도록” 하는 새 접근법을 거론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도 제재)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촉구를 중국 압박용으로 명확히 사용한다면, 미·중 갈등은 더 악화하고 한반도도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

트럼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 확실히 군비 부담을 나누고 싶어 한다. 이것은 비단 트럼프뿐 아니라 틸러슨·나바로 등도 강조하는 바다. “일



부산 ‘소녀상’ 처럼, 앞으로는 ‘과거사’ 문제가 오늘의 첨예한 정치 쟁점으로 불거질 일이 많다.

본은 GDP가 4조 달러가 넘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고, 남한은 GDP 1조 3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 11위의 경제대. … 이 국가들이 비용 부담을 충분히 하는 게 공정한 것이다.”(피터 나바로) 미국은 이전에도 비용 부담을 한국에 요구해 왔지만, 이제 그 강도가 더 세질 듯하다. 무기 수입 증액, 방위비 부담금 인상 등 미국의 요구 사항은 줄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매티스는 아베 정권의 군비 증강 방침을 두고 힘을 실어 줬다. “[일본이] 올바른 노선을 걷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신도 군사대국화로 가는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일 군사 협력의 수준을 높이라고 한국을 더 압박할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는 이전 정부들처럼 한국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기여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이미 매티스가 제주 해군기지에 미국의 스텔스 구축함 줌왈트를 배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한국을 대중국 전초 기지로 강화하며 대중국 견제에 더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즉, 사드 배치 강행, 국방비 증액, 무기 수입, 한·일 군사 협력 강화 등 트럼프 측은 한국에 광장히 비싸고 처리하기 까다로운 청구서들을 들이밀려 한다.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더 강화하려는 압력을 가하는 한편으로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에 경제 보복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한국 지배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주변 제국주의 국가들 간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점차 모순에 봉착했다. 일본의 역할이 더 빨리 강화될수록 일본의 한반도 영향력도 높아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 역사 문제가 불거지는 등 한국 지배자들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질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하는지를 놓고 지배자들의 견해차가 계속 불거질 것이다. 때로는 이로 인해 지배자들 내에서 큰 정치적 파열음이 발생할 수 있다.

황교안·유승민 등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만 대체로 한미 동맹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 특히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위를 이용해 사드 배치, 한일군사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의 대표적인 적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에 반해 문재인을 비롯한 야권 주자들은 대체로 대외정책에서 범여권

과는 다소 결을 달리한다. 특히, 남북 화해·협력 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주류 야당 내 대선 주자들의 한계도 크다. 예컨대 문재인은 최근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남북 화해를 강조하면서도 “이제 한국은 미국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위치를 격상시켜야 합니다” 하고도 말한다. 한미 동맹을 통해 국가의 지위 격상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문재인은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포럼에서 아예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자 우리 안보의 핵심 이익”이고 미국은 한국의 “혈맹”이라고 표현했다. 이러면서 중국까지 아우르는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문재인은 사드와 한일군사협정 문제 등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기를 한사코 회피한다. 국회 논의와 주변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자는 수준이다.

문재인은 대담집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9퍼센트로 높았음을 부각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GDP 대비 현 2.4퍼센트 수준에서 3퍼센트로 국방비를 늘린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2월 9일 JTBC <썰전>). 부르주아 민족주의 지향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구상과 트럼프의 ‘안보 부담 요구’가 맞물려서 낱을 곁과다. 한미동맹 하에서의 ‘자주국방’이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노무현도 처음에는 ‘동북아 균형자론’ 등을 내놓으며 한국의 친미 일변도 대외정책에 변화를 주려고 했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후퇴해, 이라크 파병, 한미FTA 체결,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으로 나아간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대외 환경이 더 나빠졌다.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하고,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불거진 상태에서 한국 국가의 처지에서는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진 상태다.

따라서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 방지와 트럼프의 대외정책 협력 사이에서 고심하다가 결국 미국에 타협할 공산이 크다. 야당이 집권해도 그 한계가 꽤 일찍 드러날 것이다. 그 정부가 미국에 타협하면, 평화를 바라는 민중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낼 것이다.

이런 불만, 그리고 지배자들의 갈등과 분열로 생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지정학적 갈등 심화가 낳을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사회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제국주의 문제를 잘 알고 적절히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정진희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은 한국여성의전화 전 상임대표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 자체 뿐 아니라 흔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독한 고통을 겪는다.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편견은 사법제도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제안된 배경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침해되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나는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조항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고소·고발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고 사건의 조사·수사·심리·재판을 유예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폭력 피해자의 성이력 증거 사용 금지 조항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성이력(성적인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전력 등)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안이다. 이를 위반해 조사·수사·신문이 이뤄지면 재판장이 즉시 이를 중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게시판에 많은 반대 글이 올라왔다. 이 법안은 일베 사이트에 게시됐는데 무고 관련 조항 때문에 정춘숙 의원실에 엄청난게 많은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가 단지 일베 같은 성차별적 우파 성향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오늘> 1월 17일자에는 르포작가 이선옥 씨가 쓴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글이 실렸다.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서도 찬반 논쟁이 소규모로 일어났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이 정의당 노화찬 의원이다.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은 1월 15일 환영 성명을 냈다. 반면, 일부 당원들은 1월 17일 성폭법개정안'저지운동본부'를 만들어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조항이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성폭력 무고죄 폐지안으로 오해한다. <울산저널> 김규란 기자는 2017년 1월 25일자 기사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성폭력 무고죄 폐지안이라고 썼는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오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법안은 성폭력 무고죄 폐지안이 아니라 성폭력 무고죄 수사 시기를 성폭력 사건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법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로 처벌받는 가혹한 일이 사라져야 한다.

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로 무리는 안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고소 취하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무고죄 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사의 성차별적 편견에 의해 피해자들이 무고 의심을 받는 일도 잦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피의자가 되면 진술조력인제도 등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만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무고죄 혐의를 벗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증거가 부족한 성폭력 범죄 피해 입증에 주력할 수가 없게 된다.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안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졸지에 무고 피의자가 돼 생겨나는 피해를 막으며 피해자들의 방어권을 강화하려 한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 과정에서 억울한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 가혹이나 저조한 성폭력 신고율이 더욱 낮아지는 것도 막으려 한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여성 단체들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죄 적용을 남발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해 왔다고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실제로, 언론에는 돈을 노리고 성폭력을 허위 신고하는 '꽃뱀' 이야기로 가득하다.

"여성은 성폭력 허위 신고(무고)를 잘 한다"는 통념은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 사이에서도 흔하다. 여전히 많은 검사와 판사들이 여성이 강력히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망상을 하며,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의 옷차림, 성격형, 품행 따위에서 찾는 경우가 흔하다.

몇 년 전 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 뒤 검찰의 무고 의심이 커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가 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무고죄 기소는 뚜렷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있다.

통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선옥 씨는 "한국의 사법체계와 정책은 여성계의 주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며 사법제도 내에 깊이 뿌리박힌 성차별을 사실상 무시하고, 성범죄에서 무고의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몇 배 높다는 근거 없는 통념을 되풀이한다.

최근 <세계일보> 기사는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3대 성범죄 관련 무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폭력 무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11월 13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베낀 <세계일보> 1월 31일자 기사를 반박한 한국여성의전화 논평대로, 무고 사건

접수 건수의 증가를 성폭력 무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한국에는 전체 무고와 분리된 성폭력 무고 통계 자체가 없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법무부에 성폭력 무고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렇게 기본 통계도 없는 상황인데도 많은 언론들이 걸핏하면 성폭력 무고율이 높다는 기사를 내보낸다. 그 근거로 제시되는 흔한 논리 하나는 성폭력 피고소인들이 무혐의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 통계도 없는 상황인데도 많은 언론들이 걸핏하면 성폭력 무고율이 높다는 기사를 내보낸다. 그 근거로 제시되는 흔한 논리 하나는 성폭력 피고소인들이 무혐의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무혐의 판정이 곧 해당 사건이 모두 무고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성범죄의 특성상 신고 여성의 진술을 제외하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무혐의 판정이 내려지기 쉽다. 증거 불충분이 해당 사건이 허위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의 무관심이나 편견이 작용해 초기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증거 확보에 실패하는 일이 드물지 않고,¹⁾ 심지어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무혐의 판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연구를 봐도, 성폭력 신고 여성은 거짓말을 잘 한다는 편견이나 성폭력을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시각 등의 이유 때문에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강간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외 연구를 보면, 허위 강간 신고가 많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법학자이자 변호사로 강간, 가정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조디 래피얼은 <강간은 강간이다>(글항아리, 2016)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그런 통념을 반박한다. 2013년 영국 검찰청이 낸 보고서에는 17개월간 접수된 5천6백51건의 강간 신고 중 단지 35건(0.6퍼센트)만이 허위신고로 나타났다.

물론 성폭력 무고가 매우 과장돼 있

다 해도, 무고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 경우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이 문제를 가볍게 일축할 수는 없다. 억울하게 성폭력법으로 몰린 사람이 겪는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요즘은 성폭력이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기에 더욱 그렇다.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해도 무고 피해를 걱정해 이 법안에 유보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 수사와 무고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증거 확보에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성폭력 신고자는 거짓말을 잘 한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면, 우선 성폭력 신고를 주의 깊게 조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이 철저할수록 무고 피해자가 생겨날 가능성도 줄어든다.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성이력 신문이 제한돼,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로 처벌받는 가혹한 일이 사라져야 한다.

다른 한편, 신상을 노출시키는 등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 관행과 이를 부추기는 수사기관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성폭력 피의자나 피고인을 유죄로 취급하거나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성폭력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성이력 증거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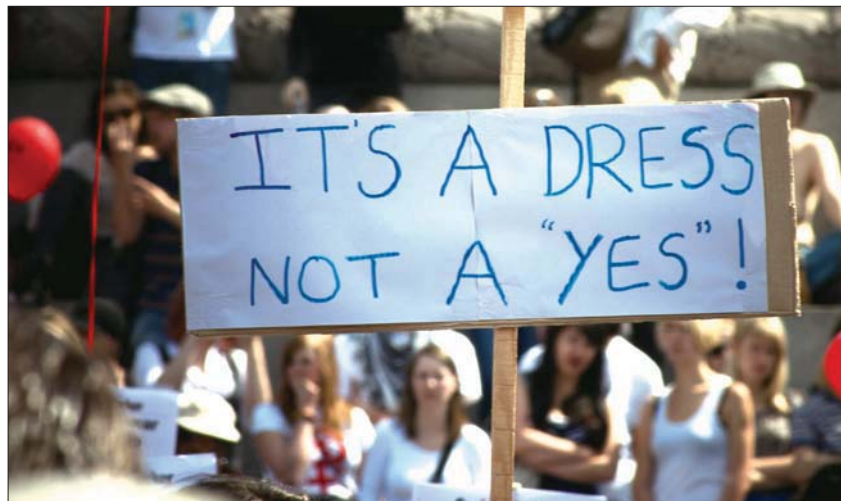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성이력 증거 사용을 금지한다. 성폭력재판에서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성이력(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성적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관련 기록 등)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다.

이런 관행은 여성이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성폭력이 아니라는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은 수사관과 재판관 모두에 널리 퍼져 있고, 온갖 편견 속에서 피해자의 성이력이 마치 증거인 양 취급된다. 가해자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피해자들의 성이력을 캐내어 거론하는 재판 전략을 쓴다.

이런 관행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모멸감과 고통을 준다. 치욕감을 견디지 못하거나 불안감과 두려움이 극도로 커진 피해자들 일부는 도중에 재판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자살하기도 한다. 2011년 한 20대 여성이 성폭행 재판에서 피해자로 증언한 다음 날, "판사의 질문에 모멸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 사건의 공판에서 가해자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성폭행이 아닐 수 있다고 변론하며 피해자가 8년 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합의금을 받아 취하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성폭력 사건 고소 합의 전력이 그 뒤 사건에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 11면으로 이어짐



"내가 뭘 입든 내 선택이다. 헛다리 짚지 마라." 여전히 많은 검사와 판사들이 성폭력의 원인을 옷차림, 성격형, 품행 따위에서 찾는 경우가 흔하다.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2월 8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 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이하 3차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을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철도 파업을 비롯해 민영화 반대 운동의 효과로 그동안 정부의 계획이 일부 지연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9일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했는데, SRT 개통으로 본격적인 ‘경쟁 체제’가 시작됐다. SRT가 철도공사의 자회사고 아직 사기업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운영권이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철도공사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명분과 요인이 되고 있다.

SRT와의 경쟁을 명분으로 철도공사에 비용 절감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철도공사는 이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2017년 정부 예산에서 공익서비스 보상(PSO) 예산도 전년 대비 약 6백50억 원이나 삭감되자 운행 축소 등 긴축 운영을 더 강화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벽지 노선이나 무궁화호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열차 운행을 축소했다. 앞으로 경전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등 7개 노선의 열차 1백12개 가운데 56개의 운행 횟수를 절반 가량 줄이고 16개 역을 무인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놔다. 이처럼 정부의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은 철도 공공성 축소와 직결된다.

철도공사의 수익은 주로 KTX 운영에서 나온다. 그런데 동일 노선을 운영하는 SRT가 그 수익을 나눠 가지게 될 테니, 철도공사의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 가려는 것이다.

철도 분할

3차 기본계획은 첫째, 2018년까지 철도공사에서 유지·보수, 물류, 차량 분야를 자회사나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물류(화물 수송) 분야를 자회사로 분리하고, 내년에 차량 분야를 자회사로 분리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전 직종에서 인력 감축(정



철도공사를 갈라미 쪼개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집회.

원 감축)과 외주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최근 철도공사는 “2017년 경영현황 설명회”에서 이를 위한 상당히 공격적인 계획을 내놔다. 그 동안에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외주화를 해왔다면, 이제는 기존 사업의 상당 부문도 외주화에 포함시켰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외주화가 비교적 추진되지 않았던 운전 분야에도 외주화 계획이 제시됐고 심지어 일부 업무에는 기간제 노동자를 투입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이런 공격은 최근 KTX 정비업무 외주화 시도로 가시화됐다. 철도공사는 KTX 정비 가운데 주행 장치, 승강문 정비 업무 등을 외주화하려 한다. 이 업무는 정규직 1백42명이 하던 일인데, 이는 고양고속차량 경정비센터에서 일하던 인력 가운데 무려 53퍼센트에 해당한다. 사측은 최근 앞으로 75퍼센트까지 외주화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철도공사가 수행해 온 관제 업무를 빼앗아 2019년까지 철도시설공단으로 완전히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철도공사가 다른 철도 운영사들과 이른바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철도공사가 관제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관제 업무 이관은 여러 민간 철도 운영사들이 생겨날 것을 전제로 하는, 민영화를 위한 핵심 조처 중 하나다. 그래서 철도노조와 민영화 반대 운동은 관제권 이관을 철도 민영화의 신표탄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해 온 것이다.

셋째, 철도산업 내 ‘경쟁 체제’ 강화와 민자 유치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7월 정부는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10년 간 19조 8천억 원 수준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철도 노선을 건설할 것임을 밝혔다. 적자 노선은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흑자가 예상되는 노선 운영은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외주화에 맞선 저항

현재는 이런 민영화 계획이 주로 외주화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12월 철도 파업 직후부터

철도 현장에서는 외주화 추진에 반대하는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 화물역인 오봉역 수송 업무 외주화 문제, 안산선 선로유지보수 외주화 문제, KTX 정비 외주화 반대 등.

KTX 정비 외주화에 반대하는 고양고속차량지부 노동자들은 1월 16일 중식집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역 홍보전과 국회 앞 시위와 농성 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철도에서 벌어지는 외주화에 맞서는 투쟁은 민영화에 반대하는 중요한 투쟁이다. 또 외주화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다 전체 인력을 줄이는 수법이기도 해 노동조건 악화도 수반한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민영화 계획이 진행될수록 철도 공공성은 더 약화될 것이다. 경쟁과 수익성을 우선할수록 철도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의 중요한 교통 수단인 지방 철도 운행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외주화 확대로 철도 이용자와 노동자

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철도 민영화는 박근혜 정권과 함께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정책이다.

백은진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청소년 성소수자 인정없는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하라
- ★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운동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 ★ 부산 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 ★ 승인서적 부도 사태로 보는 자본주의와 문화
- ★ 러시아 혁명 1백주년 연재④ 라스푸틴과 차르 아래서 신음하던 혁명 전 러시아
- ★ 박충범 씨, 공무원연금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승소 - 검찰 기소 부당함을 입증하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